

광주·전남 사회단체, 교육감 후보단일화 '통합 논의'

전남공천위 "통합선거에 맞춰 광주공천위에 협의 요청"

광주공천위 "지역 내 절차 진행…11일 단일후보 발표"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출에 따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후보단일화는 의도 통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양 지역이 각각 추진해 온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재선 도전에 맞서 후보단일화를 추진 중인 전남도민공천위원회는 3일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고,

광주시민후보공천위원회에 공식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민공천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출 가능성으로 선거 환경이 달라진 데 따른 조치"라며 "전남과 광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통합 교육과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민공천위원회는 광주지역 경선 참여 후보자들과의 공식적인 대화와 의견 교환을 요청했으며, 변화된 통합교육감 선거 구조와 방향에 대해 공동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는 1만5976 명의 공천위원이 모집됐으며, 오는 5일까지 명부 확인을 거쳐 경선인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해룡·문승태·장관호 후보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와 경선은 광주시민후보 경선과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이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출마 예비자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은 장 전 지부장이 유일하다.

장 예비후보는 "전남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도 전남도민공천위원회가 추진 중인 후보단일화 경선에는 예정대로 참여할 계획이다.

반면 광주시민후보공천위원회는 당분간 지역 내 후보 단일화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공천위는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대상으로 오는 7~10일 여론조사와 시민공천단 투표를 실시한 뒤, 11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공천위 관계자는 "전남과의 통합 후보단일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광주 출마 예정자들의 단일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오는 11일 이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전 국장은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순천시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도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군 순회 공청회 마무리

22개 시군 돌며 2주간 소통…도민 제안, 특별법에 반영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도민 의견 수렴이 22개 시군 순회 공청회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전남도는 약 2주간 진행한 시군별 도민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 의견을 특별법과 통합 정책에 반영하며, 형식적 설명회를 넘어 실질적인 공론의 장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민공청회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직접 22개 시군을

방문해 통합 추진 배경과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별 현안을 정점으로 일단락됐다.

전남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리카드 형태로 체계화해 분석하고, 이를 특별법안과 통합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도민 의견을 토대로 통합특별법 발의안에 포함된 특별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면적을 기준 300만m²에서 500만m²로 확대했으며, 능업진흥구역 해제 권한 반영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을 제도에 담았다.

김영록 지사는 "22개 시군을 모두 돌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아졌다.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요구 사항은 달랐지만, 통합 이후 지역 소외에 대한 우려와 실질적 혜택에 대한 질문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전남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리카드 형태로 체계화해 분석하고, 이를 특별법안과 통합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도민 의견을 토대로 통합특별법 발의안에 포함된 특별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면적을 기준 300만m²에서 500만m²로 확대했으며, 능업진흥구역 해제 권한 반영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을 제도에 담았다.

김영록 지사는 "22개 시군을 모두 돌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행정통합은 제도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완성돼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 정책에 반영하고, 도민 정책 제안집으로 정리해 통합 특별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민공청회는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로 제공돼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공청회 이후 지상파 방송 3사가 주관하는 권역별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열어, 행정통합을 둘러싼 평점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시도의회, 행정통합 동의안 오늘 처리

국회 입법 절차만 남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동의안을 처리한다.

광주시의회는 4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30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발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는 등의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법적 절차다.

시의회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그동안 행정통합 선언 직후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해 현재까지 8차례 TF 회의와 6차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특히 전남도의회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

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을 도출해 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거친 후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양 시·도의회에서 행정통합 동의안이 처리되면 국회의 입법 절차만 남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전체회의와 여론 수렴 공청회를 연 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1면 '광주 광천터미널' 서 계속

광천터미널 부지는 기존 신세계백화점과 제외한 시설을 철거한 뒤 백화점과 35층 규모 버스터미널 빌딩이 들어서는 '자동차정류장 부지', 주차·의료·교육시설이 배치되는 '복합시설 부지'로 공간을 재편한다. 두 부지의 지하 1층은 단일 평면 동선으로 연결돼 보행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정류장 부지'에는 백화점 신관과 대규모 쇼핑몰이 결합된 버스터미널을 비롯해 650석 규모의 가변형 다목적 공연장, 200여석 규모의 5성급 호텔, 180m 높이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업무시설에는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퍼런스룸과 포레스트 라이브러리가 조성돼 공연·관광·쇼핑이 결합된 광주 대표 마이스(MICE) 중심으로 활성화된다.

'복합시설 부지'에는 주상복합과 균형 생활시설을 비롯해 건강증진센터,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과 신세계 직영 양로시설이

계획돼 있다. 해외 학위 연계 국제학교와 인공지능 교육기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복합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광천권 일대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무진대로와 광천터미널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 187m, 폭 12m의 양 방향 2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해 고속·시외 버스는 모두 이 지하도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터미널과 백화점, 공연장, 특급호텔 이용 일반 차량도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천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 중앙으로 이전, 택시 승하차장과 편의점은 결합 부지 내부 통과로 개설 등을 통해 터미널과 백화점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는 협상을 통해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사업비 일부를 광주신세계가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올해 말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선출직 하위 20% 통보에 정치권 '술렁'

구청장 1명·시의원 4명·기초의원 10명 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현역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위 20% 평가로 인해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시당 공직선거후보자주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주지역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현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하위 20%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직선거후보자주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는 민주당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체계에 따라 진행됐으며, 하위 20%로 분류될 경우 후보자에게 20% 평가 결과에 따른 제한적 조치를 부과하는 폐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에서는 구청장 1명을 비롯해 시의원 4명, 구의원 10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광주·전남, 행정통합 최대 변수

6·3 지방선거 스타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됐다. 풀뿌리 지역권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물론 각 당의 선거 전략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넓어진 선거구에서 지지 기반을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며 후보 간 연대나 전략적 결합이 거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 등 행정부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 국민이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시·도선관위에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 정구학력 증명서, 기탁금 1000만원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향후 예비후보 등록 일정도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 국민이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시·도선관위에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 정구학력 증명서, 기탁금 1000만원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합의하고,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했다. 통합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3월 14일부터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현규·이산하 기자 gnnews1@gnnews1@gnnews.co.kr

부터 시행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휴일 재정성을 추진해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